

양곡법·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

-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‘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하 ‘양곡법 개정안’)’과 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하 ‘농안법 개정안’)’이 가결되었음.
- (양곡법 개정안) 쌀 등 양곡의 선제적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과잉생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됨.
 -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, 사전적으로 쌀 적정 재배면적 및 논타작물 전환 목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도록 함.
 - 과잉생산이 불가피하거나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 장관이 미곡(쌀)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.
- (농안법 개정안) 주요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·공급 체계 구축과 가격 급락 시 생산자 보호를 위해 마련됨.
 - 정부 및 지자체가 농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구축하도록 함.
 - 수급 불안 시 정부의 농산물 구매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고, 해당 연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신설함.

「양곡법」과 「농안법」 주요 개정 내용

| 법안 | 주요 내용 | 현행 | 개정 후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|
| 양곡법 | 양곡수급계획* | 신설 조항 | ·농식품부 장관은 미곡과 기타 양곡에 대한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함. |
| | 양곡수급관리위원회 | 신설 조항 | ·생산자단체 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 ·양곡 수급 계획 수립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. |
| | 양곡수급안정대책 | 신설 조항 | ·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의 과잉생산 혹은 가격 하락이 발생한 경우, 쌀 구매 등의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·시행 의무화 |
| 농안법 | 농산물수급계획 | 신설 조항 | ·농산물수급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함. |
| | 농산물수급조정위원회 | 신설 조항 | ·농산물수급조정위원회 법제화 ·주요 농산물의 생산·유통 조절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. |
| | 농산물가격안정제도 | 신설 조항 | ·일정 기간(해당년도)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,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 |
| | 농산물가격안정심의회위원회 | 신설 조항 | ·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선정 및 차액의 지급 비율 심의 |

*개정 전에는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‘양곡수급계획’이라 불렀음. 이번 개정안에서는 ‘양곡수급계획’을 별도로 신설하고, 기존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‘정부양곡수급계획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안 제6조에 유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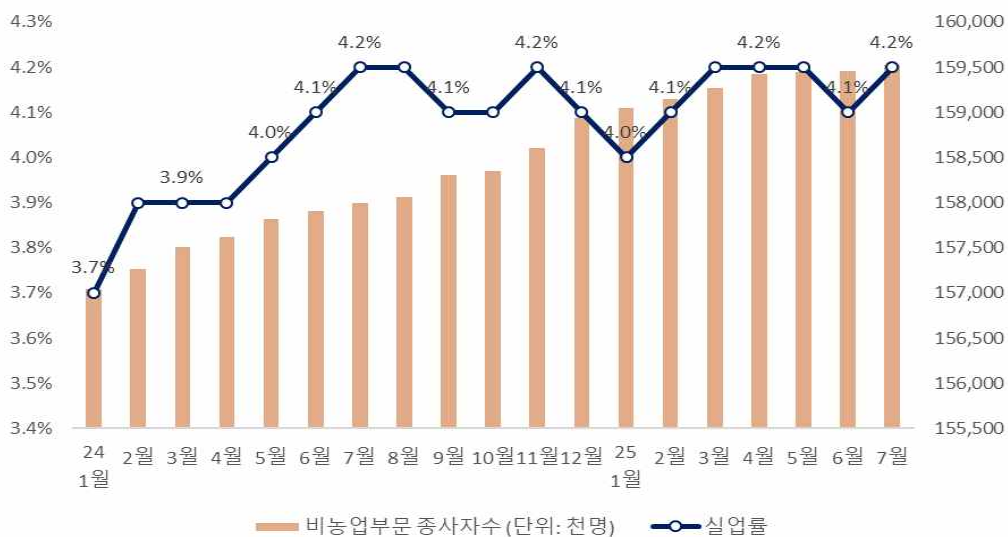
출처: 농림축산식품부 (‘25.08.04)

세계 경제 동향

● 미국, 7월 실업률 4.2% | 2025-08-01 미국 노동통계국

- 2025년 8월 1일 미국 노동통계국(Bureau of Labor Statistics)은 7월 고용 동향(Employment Situation)을 발표하며, 7월 실업률이 4.2%로 전월 대비 0.1%p 상승하였다고 밝힘.
 -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종사자 수는 전월 대비 73,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며, 지난 4월 이후 정체 상태를 지속함.
 - 경제활동 참가율은 62.2%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0.5%p 하락함. 고용률은 59.6%로 전년 동월 대비 0.4%p 하락함.
- 보건의료 부문의 7월 고용은 전월 대비 55,000명 증가했으며, 이는 이전 12개월 월평균 증가분(42,000명)을 상회하는 수준임.
-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7월 고용은 전월 대비 18,000명 증가하였으며, 개인·가족서비스 부문 또한 전월 대비 21,000명 증가함.
- 7월 연방 정부 고용은 12,000명 감소하였으며, 광업, 제조업, 운수업, 도·소매업 등 나머지 업종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.
- 민간 비농업 부문 전체 근로자의 7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.3%(0.12달러) 올라 36.44달러를 기록했으며,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.9% 상승한 수치임.
- ❖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9월에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전까지 미국 고용 시장 둔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인지 면밀히 관찰하고 9월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.

■ 2024~2025년 7월 미국 비농업 부문 종사자 수 및 실업률 ■



국내 경제 동향

● 7월 소비자물가 2.1% 상승 | 2025-08-05 통계청; 기획재정부

- 2025년 8월 5일 통계청은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.1% 상승했다고 발표함.
 - 석유류 가격 하락, 가공식품 오름세 둔화 등으로 전월(2.2%) 대비 소폭 둔화(주간브리프 Vol. 26)
 - 근원물가(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)는 전년 동월 대비 2.0%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.
 -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5% 상승하였으며, 전월 대비 변동 없음.
 -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.5% 하락하였으나, 전월 대비 1.2%p 상승한 수준임.
- 품목 성질별로 전기·가스·수도(2.7%), 개인서비스(3.1%)의 물가상승률*이 높았고, 공공서비스(1.4%), 공업제품(1.6%)의 물가상승률*은 비교적 낮았음.
 - *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
 - (농축수산물)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.1% 하락함. 반면,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3.5%, 7.3% 상승하며 전체 농축수산물(2.1%)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됨.
 - (공업제품)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.0% 하락함.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.1% 상승하며, 지난 4월 4.1%, 5월 4.1%, 6월 4.6%에 이어 4개월 연속 4%대를 기록함.
 - (개인서비스)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.2% 상승하였으며,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.1% 상승함.
- 정부는 기상 여건, 국제유가 변동성 등의 물가 변동 요인에 적극 대응하여 체감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발표함.
 - 농축수산물·석유류 등 주요 품목 수급 상황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 대응 예정

■ 2024~2025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(전년 동월 대비) ■

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● OECD-FAO 농업전망 2025-2034 발표 | 2025-07-15 OECD

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와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는 「OECD-FAO 농업전망 2025-2034」를 공동으로 발간함.
 - OECD-FAO 농업전망은 향후 10년간 세계 농업·식량시장에 대한 수급 및 가격, 기후·환경 변화 등을 통합 분석한 대표적 국제 보고서로, 각국의 식량안보 및 농업정책 수립에 활용됨.
- 2025~2034년 세계 곡물 생산은 연평균 1.1% 증가할 전망이며, 이 중 0.9%p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 증대에서 기인함.
 - 중간소득국가(middle-income countries)를 중심으로 기술·농기자재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밀과 옥수수의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- 수확면적 증가율은 직전 10년 평균(0.33%)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 0.14% 수준으로, 경지 확장보다는 생산성 향상이 생산량 증가를 주도함.
 - 농지 확장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제한적이며, 특히 고소득국가에서는 경지 감소 추세가 지속됨.
- 2034년 기준 전 세계 곡물 소비 비중은 식량용 40%, 사료용 33%, 바이오연료 및 산업용이 나머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.
 - 바이오연료 수요는 브라질, 인도, 인도네시아 주도로 연 0.9% 증가할 전망으로, 비식량 수요도 곡물 수급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됨.
-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북미보다 소 사육두수가 3배 많지만, 단위당 생산량은 1/10 수준에 그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 수요가 큼.
 - 해당 지역은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주요 대상 지역으로 강조되며, 초지 관리, 사료 개선, 수의 서비스 확대 등의 인프라 보완이 시급
- 인도 및 동남아 국가는 2034년까지 세계 식품소비 증가의 39%를 차지하면서, 직전 10년의 32%보다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. 반면 중국의 비중은 32%에서 13%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 - 중국은 고령화 및 소비 정체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, 인도·베트남·필리핀 등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도시화 확산을 바탕으로 소비 확대 전망
- 고소득국에서는 소비자 선호 변화, 정책 유도,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지방 및 당류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 - 청량음료와 가공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, 설탕 대체재 시장 성장과 함께 식품산업 구조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.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○ 지속되는 폭우 및 폭염에 대응한 농업분야 피해 예방 대책 추진 | 2025-07-21, 08-01 농림축산식품부

-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중순 이후 폭우 및 폭염으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,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 점검과 함께 현장 중심의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.

(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대응)

- 최근 집중호우(7.16~19)로 인해 전국적으로 누적 강수량이 400mm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면서, 농작물 28,491ha가 침수되고, 가축 157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함.
 - 주요 피해 품목은 벼·논콩 등 밭작물과 수박·멜론·쪽파 등 원예작물로, 일부 지역에서는 병해 발생과 생육 지연, 상품성 저하 등의 문제가 가시화됨.
-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시행 중임.
 - (농작물 피해 대응) 침수지의 신속한 배수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, 생육 회복을 위한 영양제 공급 및 현장 기술지원 강화
 - (수급 안정 조치) 피해 품목의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도매시장과 연계하여 공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, 할인 행사 등 판촉 지원 추진
 - (가축 보호) 축사 침수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·의약품 긴급 지원 및 가축 이동·구호 지원 병행
 - (현장 대응체계 강화) 농협, 지자체,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취약지역 중심의 농업재해 종합대응체계 가동

(폭염 피해 현황 및 대응)

-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·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, 6~7월(7.29 기준) 평균 최고기온은 30.0℃로 역대 1위, 폭염일수는 15일로 역대 3위*를 기록함.
 - 온열질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.7배 증가(213명→371명), 가축 133만 7천 마리 폐사 신고
 - 호우 직후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일부 농작물의 작황 부진 발생
- *폭염일수 역대 1위 '94년 17.6일, 역대 2위 '18년 15.2일
-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별 대응 조치를 시행 중임.
 - (농업인 안전) 낮 시간대 작업 자제 권고, 순찰 강화(농촌진흥청, 농협, 지자체 등), 냉각조끼·쿨링타월 등 개인 냉방 장비 제공, 행복콜센터·안부전화·마을방송 활용
 - (가축 피해 대응) 축사 온도 저감을 위한 긴급 급수, 냉방장치·차광막 등 기자재 지원,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, 취약 농가 집중 점검
 - (농작물 관리) 생육관리협의체 운영, 영양제 살포 및 병해충 방제 지원, 살수차·물탱크·양수기 활용 긴급 급수 추진
- 농식품부는 폭우 및 폭염을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,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주력할 방침임.